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36 일괄 소지품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고등학교 ○학년 1반 재학)
피 해 자 ■■■고등학교 ○학년 1반 학생들
피 신 청 인 ■■■(■■■고등학교 ○-1반 담임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수업시간에 선도부 학생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생들의 일괄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반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동원된 선도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학교 교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 교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면서, 선도부 학생 등을 동원하여 실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학교 외 다른 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고등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학생생활교육을 할 때, 다른 학생을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인권침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이 아닌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7. 3.(금)

나. 신 청 인 : ○○○(■■고등학교 ○학년 1반 재학)

다. 피 해 자 : ■■고등학교 ○학년 1반 학생들

라. 피신청인 : ■■■(■■고등학교 ○학년 1반 담임교사)

마. 신청요지 : 2015. 7. 3.(금) 피신청인이 3학년 학생들을 동원하여
○-1반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
였다.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위 구제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2015. 7. 3.(금) 5교시 경 피신청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
1반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괄적으로 검사하였다.

2)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며칠 전부터 일부 학생들 주변에
서 담배냄새가 나고 교실에서도 그와 유사한 냄새가 나서, 학생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3) 학생부에 3학년 학생들을 통해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고 사전(5
교시 수업하면서 소지품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였으며, 당시 수업 시작과 동시에 반 학생들에게 “흡연 예
방을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니?”라고 동의를
구하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동의

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소지품을 검사할 때, 이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거부한 학생은 없었으며, 소지품 검사 이후에도 항의한 학생은 없었다.

4) 당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할 때, 본인은 교실 내 중앙 교탁 앞에서 있었고, 3학년 학생들(선도부)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가방, 사물함, 책상, 몸 등을 검사하였다.

5) 소지품을 검사한 3학년 학생들과 사전에 어떻게 검사를 할 것인지 이야기 하지 않아, 특별히 검사 범위나 방법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일반적으로 학생부에서 행하는 형태로 3학년 학생들이 알아서 했다.

6)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해 적발된 것은, 담배와 라이터, 핸드폰이었고, 구체적으로 핸드폰 소지 2명, 담배와 라이터 소지 6명으로 총 8명의 학생이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물건을 학생부로 인계하고, 해당 학생들은 학생부에서 학교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7) 일반적으로는 공개적인 소지품 검사로 인해 학생들이 사생활 노출로 인한 모멸감 등을 느낄 수도 있고, 비인간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당시 진행된 소지품 검사로 인해 그렇게 느끼는 학생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학생 본분에 맞는 최소한의 물품(교칙에 위반되는 물품)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멸감 등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8) 2015. 7. 3.(금) 실시한 소지품 검사가 처음이고, 그 외에 소지품 검사를 한 적은 없다.

다. 참고인 ○○○(3학년 선도부 차장)의 주장

1) ○015. 7. 3.(금) 5교시 ○학년 1반 교실에서, ○○○(3학년 ○반, 선도부장), ○○○(3학년 ○반, 선도부 차장), ○○○(3학년 ○반, 학술부장), ○○○(3학년 ○반, 부회장) 등 4명이, 해당 반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였다.

○) 위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이유는, 해당 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내지 않아서, 그 반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

3) 처음에 해당 반에 갔을 때 피신청인이 수업 중이었고, 우리가 도착하자 피신청인이 소지품 검사에 대해 해당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였다. ○○○ 학생이 학생들한테 소지품 검사에 대해 몇 마디 말하고, 이후 피신청인이 해당 반 학생들한테 이해해달라고 말하였으며, 해당 반 학생들이 “예”하고 대답한 후, 우리들이 해당 반 학생들의 가방, 책상, 홈베이스를 검사하였다.

4) 처음에는 몸을 검사하지 않고 바지 주머니가 튀어나온 학생들만 몸 검사를 하며 지나갔는데, 어떤 학생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지 않다가, 그 학생의 바지 뒷부분(허리)이 튀어나와 있어 확인해보니, 담배와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있었다. 그때까지는 학생들을 믿고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몸 검사는 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모든 학생들의 몸을 만져서 숨겨놓은 것이 없는지 검사하였다.

5) 수업시간에 소지품검사를 하러 가긴 했지만, 학습에 지장을 받지 않는 않았다.

6) 2015년에 해당 반 외에 ○학년과 3학년의 일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고, 1학기 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신고가 들어와서 1학년 중에 한 반만 소지품 검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몸 검사는 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가방과 책상서랍만 검사했었다.

7)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해당 반 학생들과 특별한 마찰은 없었고, 소지품 검사를 끝내고 나서, “너희들 뒤져서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해당 반 학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나왔다.

라. ■■고 일괄소지품 검사 관련 설문 요약

- 설문조사일시 : 2015. 7. 9.(수)
- 설문조사대상 : ■■고등학교 ○-1반 학생 34명
- 소지품 검사에 대한 의견

설문 항목		설문응답(명)	
소지품 검사 동의	수치심,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	0	15
	수치심,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15	
소지품 검사 부동의	수치심,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	10	19
	수치심,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9	
합계			34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및 관련

서류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7. 3.(금) 5교시 수업 시작 후 10분가량 지난 시간부터 20여분 동안(13:30경부터 13:50경), 피신청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 1반 교실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반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다.

○) 소지품 검사는 피신청인이 학생부에 요청해 3학년 학생들(선도부)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3학년 ○반, 선도부장), ○○○(3학년 ○반, 선도부 차장), ○○○(3학년 ○반, 학술부장), ○○○(3학년 ○반, 부회장) 총 4명의 학생(이하, '3학년 학생들'이라 한다)이 소지품 검사를 하였다.

3) 소지품 검사를 할 때 피신청인은 교실 내 중앙 교탁 앞에 서있었고, 3학년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해당 반 학생들의 가방, 사물함, 책상, 몸 등을 검사하여,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 2명,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한 6명의 학생, 총 8명의 학생을 적발하였다.

4)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소지품 검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위 반 학생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일부 학생들이 '네'라고 답변하였다.

5) 설문조사 결과, 해당 반 학생들 34명 중 19명의 학생은 '소지품 검사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10명의 학생은 '수치심,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변하였다.

6) 2015. 7. 3.(금) 실시된 소지품 검사 외에 소지품 검사를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3조 제2항은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셋째,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위와 같이 소지품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학급, 학년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일괄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소지품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이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있어야 하는데,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학생은 특정한 학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의미하는 학급, 학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여 적발한 물품에 대해서, 그 물품이 학생 또는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¹⁾일 경우에는 압수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학생 또는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아닐 경우²⁾에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이유에 대하여, “며칠 전부터 일부 학생들 주변에서 담배냄새가 나고, 교실에서도 그와 유사한 냄새가 나서 학생들의 흡연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들 중 일부 학생

-
- 1) 담배의 경우, 이를 피우기(사용하기) 위해서는ライター, 성냥 등 불을 붙이는 도구가 필요하고,ライター, 성냥 등의 불을 붙이는 도구는 학교에 화재 등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어, 담배와ライター 등을 압수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 학생이 화장품을 가지고 학교에 오는 경우, 화장품은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이 아니므로 압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임. 하지만, 교칙 등으로 화장품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방침(교칙)상 소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보관했다가, 하교 시 학생에게 소지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직접 돌려주거나,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 방침(교칙)을 설명하고 돌려주어 적절히 지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들이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지품 검사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상황과 관련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위 인정사실 1)항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은 해당 반 전체 학생(불특정 다수)을 대상으로 일괄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실시한 일괄소지품 검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지품 검사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은 학생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소지품 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반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위 인정사실 4)항 및 5)항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모두 동의가 된 것처럼 여기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지품 검사는 “소지품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을 고려하여 소지품 검사를 받는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2)항 및 3)항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검사를 받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괄적으로 짧은 시간에 소지품 검사를 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함으로써, 검사를 받았던 학생들이 느꼈을 수치심은 교사가 행한 것에 비해 더욱 심했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가능하고, 학생이 학생의 몸을 더듬어가면서 소지품을 검사함으로써 더욱더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정사실 5)항과 같이 해당 반 학생들 중 10명의 학생들은, 일괄 소지품 검사로 인해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해당 반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행위는, 검사 장소, 검사자, 검사 방법(예, 가방, 주머니, 신체접촉 등) 등에 있어서 부적절하므로, 해당 반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업시간 중에 일괄 소지품 검사에 동원되었던 3학년 학생들은 비록 ‘수업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수업시간에 동원되어 일정시간동안 수업을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 3학년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5. 7. 3.(금) 5교시에 13:30경부터 13:50경까지 피신청인

이 행한, ■■■고등학교 ○학년 1반 학생들에 대한 일괄 소지품 검사는, 해당 반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3학년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동원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 3학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하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동원되어 다른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검사를 받는 학생의 몸을 더듬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은,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4.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별지]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정,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